

지엠은 자해공갈, 정권은 어영부영, 노동자는 어디로

한국지엠 총고용 보장 인천결의대회... “문재인 정부, 지엠에 총고용 보장 요구해야”

한국지엠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의 생존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총력투쟁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한국지엠 경영 위기는 지엠 본사의 착취구조가 원인이다. 지엠은 노동자의 고용을 볼모로 임금과 정



부 지원금을 강탈하려 한다” 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인천대책위원회는 4월 4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부도 협박 중단, 엄정한 경영 실사,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인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인천지부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로벌 지엠은 노조와 정부를 상대로 일방 희생과 정부 지원금을 강요하며, 지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며 “세상 어느 자본이 자기 회사를 부도내겠다고 협박하는가”라며 분노했다.

배리 앵글 글로벌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3월 26일 노조 한국지엠지부를

만나 “4월 20일까지 노조와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부도처리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대회를 통해 “한국지엠과 부품사 노동자, 지역 시민과 국민 모두 지엠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가 참여하는 엄정한 경영실사로 경영부실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글로벌 지엠은 협조하지 않으면 부도내겠다고 칼을 꽂아놓고 우리를 협박할 권한이 없다. 부도 협박에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답하겠다. 금속노조가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결의했다.

임한택 한국지엠지부장은 글로벌 지엠의 고의 부도 협박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글로벌 지엠에 정규직,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지부는 지엠에 요구를 받지 않으면 교섭과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라며 총고용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일회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수익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지엠은 빨대경영, 먹튀 경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지엠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엠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와 시민들은 먹튀 자본 글로벌 지엠을 상징하는 풍선을 터트리며 대회를 마쳤다.

글로벌 지엠은 지난달 2천 5백 명에게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 신청 노동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글로벌 지엠은 부평과 창원공장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정부지원금을 요구하면서 3천 4백 명을 더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4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조선 노동자 죽이는 반노동 정책, 지방선거에서 심판”

조선업종 노조연대 결의대회... “문재인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 비정규직화·죽음 외주화”

조선소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방관하면 6.13 지방선거에서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4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분쇄, 조선 노동자 생존권 쟁취 조선노연 결의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3월 8일 성동조선 법정관리와 STX조선 노동자 70% 해고를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정몽준 현대중공업 자본은 4월 3일 2,5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업은행장과 노사정위원장이 금호타이어 노동자 팔목을 비틀어 엉터리 합의안에 도장 찍게 했다. 문재인 정권이 혈값에 우량기업을 외국에 파는 매국노 같은 짓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은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사업장과 원하청의 벽을 넘어 연대의 정신으로 모였다. 중형조선소 상황이 갈 데까지 갔기 때문이다”라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청와대로 가지”라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홍성태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정책은 없다. 사람 자르고 공장 폐쇄하는 게 친노동정책이면 우리는 친노동정책 거부한다”라며

“금속노조라는 방패로 끝까지 싸워야 현장에 돌아갈 수 있다. STX조선, 성동조선조합원들은 지회장을 믿고 투쟁해 현장으로 돌아가자”라고 당부했다.

성동조선지회는 채권단이 3월 8일 발표한 법정관리 안에 맞서 상경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STX지회는 생산직 75%를 줄이라는 정부와 채권단의 결정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를 점거하며 싸우고 있다.

강기성 성동조선지회장은 “문재인 정권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죽음의 외주화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발표한 일자리 정책을 역주행하고 있다”라며 “약속도 어기고 앞뒤도 맞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죽을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분노했다.

이우형 STX지회 조직부장은 “현장에서 배 만들 사람이 모자라다. 정규직 해고하고 비정규직 고용하려는 문재인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정부와 채권단이 법정관리로 협박하지만, STX조선이 법정관리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현대중공업지부가 정몽준 자본의 기습 정리해고 공격에 맞서 투쟁이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황종민 수석부지부장은 “노동자는 임금 동결, 휴업, 휴직에 동의했다. 일감나누기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양보했더니 자본의 구조조정 칼날

등에 꽃으려 한다”라고 전했다. 황종민 수석은 “현대중공업지부는 어제 긴급 집회를 열고 지부장은 천막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종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이익을 내면서 전격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조선업 호황을 앞두고 자본의 이익을 늘리려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속셈이다”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 잔치만 거듭하고 있다. 정말 일자리를 만들려면 자본의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행진해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조선 노동자들은 청와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손을 놓으면 경남과 울산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선 노동자를 밟고 지나가야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경남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폭로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반 더불어민주당 전선에 나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구조조정, 제조업 전망 놓고 노정교섭 하자”

금속노조, 노정교섭 촉구 국회 기자회견… “구조조정 과정 노동자 배제 중단해야”

금속노조와 정의당이 4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제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노조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먹튀 논란에도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매각을 강행하는 등 제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국책은행이 노동배제를 중단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부에 업종별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제조업 전반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정교섭을 거부하면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을 만들겠다. 정부는 책임 있게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노정교섭에서 일자리, 외국자본의 먹튀, 제조업 발전 전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합의안에 대해 “산업은행장이 단위사업장까지 찾아가 강압과 협박으로 합의를 만들었지만, 금속노조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 40%가 이번 합의를 반대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조선업의 숙련노동을 유지해야 산업 회복기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가차 없는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좋은 일자리가 뒷받침해야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노정교섭으로 불황을 헤쳐 나갈 기회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현장노동자들은 산업은행과 정부의 실책, 일방 구조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제조업의 한 축인 노동자가 구조조정 대책 수립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한택 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한국지엠이 구조조정에 열 올리고 각종 비용을 줄이고 있다. 군산공장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정

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는 총고용보장을 요구한다. 산업은행이 이 사태의 공범이다. 노동자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황호인 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정부가 한국지엠의 불법 비정규직 사용,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와 함께 한국지엠을 살릴 고민과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산업은행의 실사만으로 부족하다. 노동자가 한 주체로 실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책은행의 경영실패로 어려움의 빠진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중형조선소 생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태 노조 성동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주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이 들어오는 수주를 막고 있다.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조작된 존속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법정관리에서 기업회생 결정이 나면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삼성 무노조 경영은 시대역행 반헌법 경영”

삼성 노동자 공동기자회견…무노조경영 폐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산재 피해노동자 사과와 보상 등 요구

최근 삼성그룹이 만든 수천 건의 ‘노조 와해 문건’이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계열 노동조합들이 삼성의 노조피해와 무노조 경영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는 4월 3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라는 이름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의 노조피해 책동과 무노조 경영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삼성그룹 네 개 노조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40년 전 만든 무노조 경영 방침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헌법 경영”이라고 비판하고, “손자 이재용 부회장이 결사해지의 마음으로 삼성을 바로 세우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네 개 노조는 “노동조합이 삼성을 감싸고 통제할 수 있는 대인임을 선언한다”라며 삼

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피해 책동에 공동으로 투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합원들은 이재용 부회장 면담요청서를 삼성 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삼성은 삼성에스원 소속 경비를 동원해 막았다. 조합원들은 경비들과 충돌이 벌어지자 “같은 노동자끼리 싸울 수 없다”라며 면담요청서를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